

美 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(안)

통상연구실

'25.12.9.(화)

1. 개요

- (일시) '25.12.19(금) 15:00~16:30 ※ (보도계획) '25.12.20(토)
- (장소) 삼성동 코엑스 308호
- (목적) 美 IEEPA 관세에 대한 연방대법원 최종 판결('26년초 예상)로 행정부 패소 시를 대비해 관세환급 절차 및 기업 대응전략 등 설명
- (주요내용)
 - 美 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시 예상 절차
 - 관세환급 실무, 과거 유사 사례 및 기업 대응전략

2. 세부 일정(안)

| 시 간 | | 내 용 | 비 고 |
|-------------|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5:00~15:05 | 5' | 인사 말씀 |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|
| 15:05~15:15 | 10' | [Intro] 美 IEEPA 관세 내용과 소송 동향 |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|
| 15:15~15:45 | 30' | [발표1] 관세 환급 관련 법적 쟁점 및 대응전략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① 판결 시나리오별 관세 환급 범위② 관세 환급 절차 및 주요 법적 쟁점③ 기업 유형·상황별 맞춤 전략(이의제기, 소송 등) | 법무법인 세종 윤영원 변호사 |
| 15:45~16:15 | 30' | [발표2] 관세 환급 실무 및 유의사항 *순차통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① 관세 환급 실무 및 사전 준비사항② CBP 내부 프로세스·관행 및 과거 유사 사례③ 계약·인코텀즈에 따른 환급권 이슈 | 법무법인 김앤장 존 레너드 고문 (前 CBP 부국장) |
| 16:15~16:30 | 15' | 질의응답 | 참석자 전원 |

□ (배경) IEEPA 관세의 환급 가능성 및 절차 관련 기업 문의가 증가하여, 워싱턴지부 계약 로펌(Akin)에 자문을 의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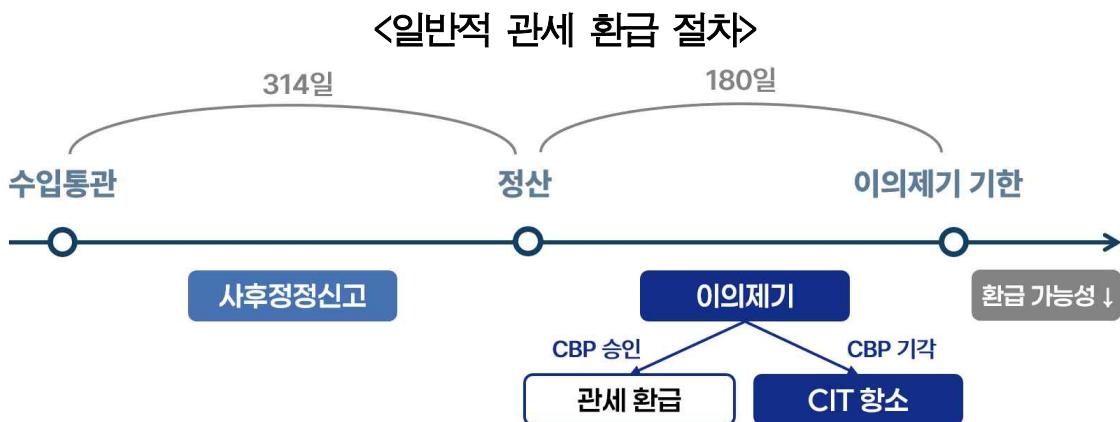
□ 판결 전망 및 관세 환급 범위

- 現 연방대법원의 보수적 성향으로 인해 행정부가 승소할 가능성도 있음
- 위법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관세 환급 범위를 소송 원고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나, 他기업도 판결에 근거해 관세 환급 절차 진행 가능

□ 관세 환급 절차

- 관세 환급 방식은 불확실하나 일반적인 행정 절차를 따를 것으로 예상
- 환급 방식은 각 수입신고 건의 정산(liquidation)* 여부에 따라 달라짐

* 정산(liquidation)은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신고 · 납부한 관세액을 관세청(CBP)이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로 통상 314일 소요



- (① 정산前) 관세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수입자는 건별로 사후정정(Post Summary Correction, PSC)만 제출하면 되어 절차상 불확실성이 낮음
- (② 정산後) 정산일로부터 180일 내에 美 관세청(CBP)에 이의제기(protest)를 해야 하며, CBP 결정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달라져 불확실성이 높음
 - CBP가 정산은 대통령의 관세 결정을 기계적으로 집행한 것에 불과해 이의제기 대상인 '결정(decision)'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음
 - 이의제기가 기각될 경우 국제무역법원(CIT)에 항소 제기 필요

□ 기업 권고사항

- (1) 정산 전에 대한 환급은 적시에 이의제기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어 이의제기는 필수
 - 비용 효율성 면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이의제기를 진행하는 방안을 권고
 - 이의제기 기한이 임박했음에도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환급권 보전을 위해 미리 이의제기를 하고 CBP에 판결 전까지 결정 유보를 요청할 필요
- (2) 법원의 정산 금지명령을 구하기 위해 선제적 소송도 가능하나, 유사 소송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성과 적절한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
 - 정산 이후에는 환급 불확실성이 높아져, 정산을 막기 위한 예비적 금지명령을 구하는 선제적 소송이 늘어나고 있음
 - 정산이 12/15부터 본격화되나, CBP는 정산 보류 · 연기 요청을 거절 중
 - 정산 후에도 이의제기 및 기각 시 CIT 제소가 가능하고, 소송 비용, 사건 기록 공개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선제적 소송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음
 - 다만 향후 몇 주 내 대규모 정산이 예정된 기업은 추가적인 안전 장치로서 법원의 정산 금지명령을 구할지 여부를 신속히 검토할 필요
- (3) IIEPA 관세 납부 내역 및 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관계사 · 공급업체 · 고객과 환급금 분배 · 정산 방식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
 - IIEPA 관세가 부과된 수입 건을 정확하게 취합 · 정리하고 각 건의 정산 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함
 - 한국 수출자는 환급 청구 자격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, 미국 현지 자회사 또는 수입자와 협력해 필요 서류와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필요 끝.